경제혁신 3개년 계획 "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" 창조경제 경제혁신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

2017년 2월 14일(화) 오후 4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7. 2. 14	담당부서	전기통신제품안전과 생활제품안전과
담당과장	정민화 과 장(043-870-5440) 배진석 과 장(043-870-5454)	담 당 자	김선근 사무관(043-870-5445) 이경희 연구관(043-870-5451)

산업부, 업계·소비자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전안법 적극 해결의지 표명

– 산업부 제1차관 주재 간담회 개최 –

□ 산업통상자원부(국가기술표준원)는 2월 14일 정만기 제1차관 주재로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(이하 전안법)에 대한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 및 구매대행업계, 소비자단체,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안법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.

□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대문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테크노상인운영회, 구매대행업계, 한국온라인쇼핑협회, 한국병행수입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, 학계,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, 전안법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제도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.

○ 의류업계에서는 해외에 비해 국내 안전관리 수준이 엄격하며, 신속한 제품개발이 필요한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,

○ 구매대행업계는 구매대행이 서비스 업종이므로 구매대행업자에게 시험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, 외국에 구매대행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.

○ 소비자단체는 안전에 대한 최근의 국민관심을 고려할 때, 사업자들이 제품 안전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.

○ 전문가들은 소비자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안전규제의 이행 가능성과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.

□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전안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조자 및 유통업자에 대해 이행 부담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.

○ 이번 사안을 계기로 안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선진화와 전안법 사안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밝혔다.

○ 앞으로, 국표원은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업종, 유통업계,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.

※ 간담회 **사진은 오후 4시 30분경**에 별도 배포예정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(전기용품관련) 정민화 과장 (☎ 043-870-5440) 김선근사무관 (☎ 043-870-5445) 생활제품안전과(생활용품관련) 배진석 과장 (☎ 043-870-5454) 이경희연구관 (☎ 043-870-5451)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